

전후 일본 경제재건 구상과 한반도

다니 게이(히토쓰바시대학)

1. 들어가며

한반도에는 다양한 광물자원이 풍부했기 때문에 식민지 조선은 제국 일본에 있어 중요한 자원 공급지였다. 특히 조선 북부지방의 석탄이나 철광석은 일본의 중화학공업을 지탱해주고 있었다. 따라서, 패전에 따른 식민지 조선의 상실은 실로 일본 경제의 위기로 다가왔다. 그렇다면 패전 후 일본은 이 위기에 어떻게 대응했을까.

전후 일본 경제재건구상에 있어서는, 이미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특히 전후 일본의 ‘경제외교’나 ‘아시아 외교’ 중 경제재건구상을 내세운 일본 외교사 연구로, 와타나베[1985]와 이노우에[2004]를 들 수 있다. 그런데, 구 식민지와의 경제 관계 재구축이라는 관점에서 경제재건구상을 검토한 연구는 적다.

그런 가운데 이노우에[1998]은 패전 직후 일본의 대외 구상인 ‘경제적 지역주의화 경향’에 주목해 전후 일본 외교에는 ‘한반도와의 대외관계에 있어 전쟁 전의 <연속>에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전망이 있다’고 지적했으며 본고에 있어 중요한 선행 연구였다. 또한 전술한 이노우에[2004]도 ‘경제외교’를 중심으로 한 전후 일본 외교 구상에 관해 전쟁 전과 전후의 ‘동아시아’ 연속성을 논하고 있다. 단 이노우에는 일본과 한반도의 경제관계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춘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고와는 그 논의의 위상이 다르다.

전후 일본의 경제재건구상에서의 한반도의 입지라고하는 본고와 공동된 과제에 집중한 연구로서는 송[2015]를 들 수 있다. 송은 전쟁 전 일본의 한반도 경제에 대한 평가를 정리하며 패전 직후의 동아시아 지역주의구상을 둘러싼 언설들을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그리고 미일 양국이 한반도 경제를 일본경제의 일부로 바라보는 ‘경제적 내선일체’라는 입장에서 전후 동아시아를 전망했었음을 명백히 했다. 그러나 송은 특히 스즈키 다케오(구 경성제국대학교 교수)에 초점을 맞춰 전후 일본 경제재건구상에서의 조선 인식을 분석했는데 스즈키 이외의 일본측 액터나 미국의 전후 구상은 더 많은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일본경제사 분야에서는 가네코[2002]가 ‘일본-동아시아경제관계의 전전, 전시, 전후의 연속성’에 주목해 부흥기 일본의 대(對)동아시아무역 실태 규명을 통해 ‘일본-동아시아경제관계의 일관된 중요성’ 강조했다. 그러나 경제재건구상에 있어서 대동아시아무역의 판단에 대해서는 가네코의 연구에서는 다루지지 않았다.

그리하여 본고는 외무성 외교사료관 소장 사료를 시작으로 한 일차 사료에 기반하여 구 식민지와의 경제관계 재구축이라는 시각에서 전후 일본의 경제재건구상을 재검토한다. 다시 말해 패전 직후의 일본 경제재건구상에 있어 한반도가 어떠한 가치로 평가 받았는지를 밝히는 것이 본 논문의 구체적 과제다.

2. 일본과 동아시아와의 경제관계 재구축 시도

앞서 말했듯 패전에 따른 식민지 조선의 상실은 일본경제에 위기를 안겨줬다. 패전 직후에 외무성 조사국이 작성한 문서에서는 식민지 조선의 소실에 따라 5.72 억엔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 추산, 특히 식민지 조선이 공급했던 철광석이나 석탄은 위기적 수급상황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초기 대일점령정책은 비군사화와 민주화를 기본 과제로 한 엄격한 내용이었다. 그리고 GHQ 는 일본경제의 파국적 현황 및 그 부흥에 대해서도 극히 냉담했다. 그 결과 초기점령정책은 일본의 무역을 필요최소한으로 억제하고 완전한 관리무역체제 하에 두는 방침을 취했다.

그래서 일본정부는 GHQ 와 협상하며 무역 계획을 수립했다. 여기서 주목해야할 점은 수출입 상대국으로서 미국은 물론 동아시아 각국, 각 지역도 계획해 둔 것이다. 가령 쌀의 수입국은 조선, 소금의 수입국은 중국이며, 물품의 수출국도 대부분은 중국, 조선이었다.

동아시아와의 재결합을 기획하는 듯한 무역 계획의 배경에는 어떠한 경제재건구상이 있었던 것일까. 그 일부분을 엿볼 수 있는 자료가 외무성 특별조사위원회 보고서 ‘일본경제재건의 기본문제(이하 ‘기본문제’로 약기)’다. ‘기본문제’는 경제학자, 재계인, 평론가, 관료 등 명망 높은 전문가들의 토의를 거쳐 1946 년 3 월에 완성되었다. 따라서 ‘기본문제’는 일본의 정치경제 엘리트가 패전 직후에 공유해온 인식과 생각을 작성했다고 여겨지는[타카세 2008]. 본고에서는 일본과 동아시아와의 경제관계에 주목하여 ‘기본문제’로 지칭된 경제재건구상을 간단하게 정리하고자 한다.

‘기본문제’는 전전의 일본경제의 특징으로서 서양과 동아시아 사이에 위치한 ‘이중적인 성격’을 지적했다. 특히 일본과 동아시아와의 경제관계에 대해서는 일본이 식량과 공업 원료를 수입해 섬유제품이나 공업제품을 수출한다는 ‘분업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통찰했다. 때문에 ‘기본문제’는 ‘세력권 내의 분업 이익 상실’에 대한 위기감을 드러냈다.

그래도 일본 공업의 ‘중간자적인 성격’은 그 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예측됐다. 따라서 ‘기본문제’에서는 패전에 의한 관계 단절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항상 동아시아 각 지역과의 분업협력관계를 설정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는 결론을 서술했다. 다시 말해 동아시아 각국, 지역이 일본에 공업 원료를 공급하고 일본은 이 원료를 갖고 생산한 공업제품을 동아시아 각국, 지역에 수출한다는, 전전의 일본과 동아시아의 경제관계 재구축을 목표로 한 것이다.

나아가 패전 후 일본과 한반도 관계에 대해 ‘기본문제’ 이상으로 중요한 자료로 꼽히는 것은 외무성 조사자료 ‘경제적 관점에서 본 자국 조선통치정책 성격과 그 문제(이하, ‘조선통치정책’)'이다. ‘조선통치정책’은 외무성조사국 제 3 과가 도쿄산업대학(현 히토츠바시대학)의 사사오노부오에게 위탁한 연구 보고서다. 본고에서는 전전 조일경제관계의 재구축이라는 관점에서 ‘조선통치정책’으로 전개된 논의를 검토하고자 한다.

사사오노부오는 식민지 조선의 상실에 대한 위기감을 전제로 그 경제적 손실을 분석했다. 그리하여 식민지 조선의 상실에 따른 ‘무역에 있어서의 불이익’으로서 조선 식민지 지배에 따른 ‘광역 분업 이익’ 및 ‘실질적 예측성을 전제로 한 교역조건결정 유익성’이라는 두 가지 상실을 들었다.

그러나 사사오는 조일 간의 경제재결합을 전망했다. 여기서 주목해야할 점은 사사오는 ‘반도 개발에 따른 경제적 이익 분배는 반도인 일반에 있어 공정한 균점을 안겨주었다고는 말할 수 없다’며 식민지 지배를 비판하던 입장에서 ‘실질적 예측성을 전제로 한 무역조건결정 유익성’의 재현을 부정한 점이다. 그 점에서 사사오는 ‘광역적 분업 이익’의 재현에 기대했다. 다시 말해 조일 간의 ‘지리적 관계’와 ‘무역상품 품질 특수성에 따른 의존관계’에 더해 일본의 ‘국내생산능률 향상이 실현’된다면 다시금 ‘광역적 분업 이익’이 나타날 것이라

주장한 것이다.

사사오가 전망한 ‘광역적 분업 이익’은 동아시아에 대한 일본의 선진성을 전제로 하면서도 ‘공업상 대등한 분업 관계 성립’을 기획했던 ‘기본문제’의 구상과 상통하는 것이다. 거의 동시기에 작성된 ‘기본문제’와 ‘조선통치정책’이 일본의 식민지 지배가 부정당한 패전 직후에 동아시아와 경제관계 재구축을 시도했다는 점은 동시기의 일본외교 상 ‘아시이지역주의’화 경향을 나타내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물론 일본의 선진성을 전제로 한 ‘분업 관계’라는 발상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는 논의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 함정을 상징하는 것이 사사오의 라이벌이었던 스즈키 다케오다. 조선총독부의 통치를 ‘선의의 악정’이라 칭하는 스즈키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은 ‘조선 농촌에 의존하는 반봉건적 토지관계의 유제’라는 ‘근본적 과제의 해결을 피하지 않음’에만 해당되며 식민주주의 그 자체에 대한 비판은 결여된 점에 대해서 사사오와는 대조적이다.

3. 해방 후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일본정부의 인식

그런데 ‘기본문제’와 ‘조선통치정책’의 구상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동아시아와의 경제관계 재구축은 난항을 겪었다. 엄격한 초기점령정책에서 일본에 인정되었던 수출산업은 국내원료에 의거한 경공업에 한정돼, 사전에 상정해 둔 대동아시아무역은 대부분 실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대남조선무역은 수출입품목의 수급 불일치로 침체를 겪었다.

대남조선무역 부진의 구조적 배경에는 남한의 정치적 불안도 한몫했다. 미국과 소련 두 대국이 조선인민공화국을 부정한 이후, 좌우합작운동의 좌절과 미군정, 경찰, 우익의 민중탄압 등 남한의 정치 정세는 혼란함 그 자체였다.

그렇다면 일본정부는 이러한 남한의 정치정세를 어떻게 보았을까. 1947년 8월, 외무성 조사국제 5과는 ‘조선정세추이 전망’이라는 주제의 조사자료를 작성해 일본의 패전 직후부터 1946년말까지 한반도의 정치정세를 상세히 분석했다. 여기서 주목해야할 점은 조선 남부의 정치적 혼란과 조선 북부의 통제가 대조적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남한의 좌우합작운동 실패를 혹평하는 한편 북한임시인민위원회의 통제는 높게 평가했다.

1947년 후반에는 남한의 정치적 혼란은 더욱 극심해졌다. 미국은 모스크바 회담 결정을 완전히 무시한 채 조선문제를 국제연합에 부쳤다. 또한 유엔 감시 하의 조선총선거(남한단독선거)라는 노선을 추구하며 유엔한국위원회를 설치했다. 이러한 미국의 일방적인 행동은 소련이나 북한 뿐만 아니라 남한의 민중에게도 지지 받지 못했다. 그 결과 1948년에 들어서자 남한단독선거 실시해 대해 다양한 반대운동이 펼쳐졌다.

1948년 4월 외무성조사국제 5과가 작성한 ‘조선 정세의 추이’를 주제로 한 문서는 단독선거 실시를 둘러싼 남한의 정치적 혼란도 객관적으로 분석했다. 다시 말해 동 문서는 한반도의 정치정세에 있어서의 미국의 열세(소련의 우위)를 지적했다. 또한 동 문서에서는 남한 경제에 대한 저평가도 눈에 띈다. 구체적으로는 식량부문의외의 남한 경제에 대해 ‘자립의 어려움이 명백해 보인다’고 분석했다.

나아가 다른 외무성내부문서는 미군정의 토지 정책에 대해 의문을 제시하면서도 조선 북부의 소련군정의 간접 방식을 높게 평가했다. 그리고 남한단독선거 실시는 ‘조선 내부의

불안정함' 을 드러냄과 동시에 일본정부가 유엔감시하의 조선총선거의 본질을 정확히 인식했던 점은 주목할 가치가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문서가 '국제적으로 미소의 항쟁과 대립이 해결되지 않는 한 남북한 정권 통합과 단일화는 불가능하다' 고 서술했다는 점이다. 1948 년 시점부터 일본정부 내에는 한반도의 남북 분리 고착화를 예상하는 견해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한반도 정세 인식은 전후 일본의 '두 개의 조선' 정책의 원류로도 보여진다.

4. 대일점령정책의 '변경' 과 지역통합구상

전술한 대로 초기점령정책은 비군사화와 민주화를 목적으로 했으며 일본의 경제적 궁핍에 대해서는 극히 냉담했다. 그런데 패전 후 일본은 미국의 예상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장기적 경제침체와 기아에 빠졌다. 그리고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사회주의적 성격이 강해졌다. 그 결과 대일점령정책은 1947 년경을 마지막으로 일본경제의 부흥을 꾀하는 방침으로 '변경' 되었다.

점령 정책이 '변경' 된 배경에는 '냉전' 이라는 격변에 따른 미국의 아시아 전략 전환도 있었다. 다시 말해 미국은 중국의 공산주의세력 확대와 유럽의 소련과의 대립 격화에 의한 아시아의 반소련 전략 전개라는 관점에서 일본을 '공산의 방벽', '아시아의 공장' 을 기획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일본과 동아시아와의 경제관계 재구축을 통해 일본경제를 조기 재건, 자립시킬 목적이었다.

여기서 주목해야할 점은 1948 년 5 월에 발표된 '일본의 전략적 중요성' 이라는 제목의 중앙정보국(CIA)의 정세분석에서 일본의 원재료공급지 및 수출시장으로서의 한반도, 만주, 중국 북부 전체를 상정했다는 점이다. 동 문서는 동북아시아는 '지리적 인접성과 경제발전의 성격에 따라 일본경제를 보완하는' 존재로서 상정해, 특히 만주의 철광석, 중국 북부의 석탄, 북한의 합금석이 일본의 '통합된 중공업 기초를 완성한다' 고 보았다. 이렇듯 CIA 가 제시한 '일본의 자연스러운 무역 패턴' 은 패전 직후 일본 측의 구상, 즉 '기본문제' 나 '조선통치정책' 에서 재구축이 기획된, 전전 일본과 동아시아 간의 경제관계와 궤를 같이했다. 요약하자면 대일점령정책의 '변경' 에 동반하여 미일의 정책 결정자들은 지역통합구상을 공유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을 필두로 동아시아에서도 냉전 구조가 고착화됨에 따라 중국 북부, 만주, 북한을 일본경제와 연계시키기는 거의 불가능해졌다. 그래서 동북아시아를 대신해 동남아시아를 일본경제와 통합시키는 안이 부상했다. '거대한 반달 지대' 로 칭해진 이 지역통합구상은 미국의 군사전략을 전제로 일본의 중공업재건과 동남아시아개발을 한데 묶었다. 구체적으로는 미국-일본-동남아시아라는 상하관계 구조를 지닌 삼각 무역이 구상되었다.

그리고 '거대한 반달 지대' 구상에는 동남아시아의 여러나라들과 함께 일본경제의 배후지로서 한국도 있었다. 미일의 정책결정자들은 한국산 쌀과 그 시장에 큰 기대를 걸었다. 한국정부 역시 한일 경제 '재결합' 을 통한 '경제부흥' 전략을 추구하고 있었다.[오오타 1999]

그 결과 1949 년, 패전 일본의 첫 본격대외협상으로 한일통상교섭이 시작되었다. 이 한일통상교섭에 대해서는 일차 사료에 기반한 일본정부의 인식이나 동향에 대한 분석을 심층화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향후 연구 과제로 삼을 예정이다.

参考文献

- 井上寿一（1998）「戦後日本のアジア外交の形成」『年報政治学』49: 129-147.
- 井上寿一（2004）「戦後日本の外交構想」『年報政治学』55: 67-80.
- 太田修（1999）「大韓民国樹立と日本」『朝鮮学報』173: 1-48.
- 金子文夫（2002）「対アジア経済関係」原朗編『復興期の日本経済』東京大学出版会, 29-68.
- 宋炳巻（2015）『東アジア地域主義と韓日米関係』クレイン.
- 高瀬弘文（2008）『戦後日本の経済外交』信山社.
- 渡辺昭夫（1985）「戦後日本の出発点」同編『戦後日本の対外政策』有斐閣, 4-31.

(번역담당자:박소윤)